

# 당정,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 추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  
한동훈 "尹 3년차, 성과 체감시켜야"

민생경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정쟁 관계없이 추진...野 적극 설득

정부·여당이 29일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단말기유통법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후속조치,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 주요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5개 분야의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협의회)를 열고 결과를 브리핑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1년차가 비정상 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2년차가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하는 것이었다면, 3년차는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 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는 기간 어려웠던 내수가 설비, 투자, 소비 중심으로 반등했으나 수출이 기저효과와 일시적 영향으로 조정받는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수 각 부분 별로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 법안이 빨리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를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책·국민 안전·지역균형발전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입법과제엔 ▲반도체산업 강화특위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

성하는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 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 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입법과제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 선정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 분야에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는 ▲답페이커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의 후속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문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형법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 기본법 등이 개정사안으로 담겼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법 등이 추진된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 '4대개혁' 연내 성과 주문... 임기후반 국정동력 도모

(연금·의료·교육·노동)

국무회의서 개혁 과제별 시한 제시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미래 없어"  
이태원참사 유가족에 위로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연내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 과제별로 목표 시한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 임기 후반 국정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달 11일을 기준으로 임기 절반을 지낸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 일·가정 양립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택 제공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급여 및 실손보험개혁안 마련,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1의 민생이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교육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차질없이 확대해야 한다고,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교원 연수·홍보 영상 활용 등을 통해 안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이날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

# 한동훈, 비전제시는 '참신' 당정관계 불안정은 '여전'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  
우상향 성장·격차해소특위 등 제시  
당내 갈등, 빈손면담 등 리스크 요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우상향 성장'과 '격차해소' 등의 비전 제시는 참신했으나 당정관계에서 나타나는 잇따른 불협화음은 리스크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

간의 소회를 밝히고 주목받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7월23일 친윤(친윤석열)계의 집중 견제 속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여야 대표 회담, 10·16 재·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등 굵직한 행사를 거쳤다.

한 대표는 당의 비전과 관련해서도 저성장 국면에서도 대한민국이 그 속에서 기회를 잡아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쓰는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

침 하기 위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당에 설치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사회 각 분야의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논란이었던 '불안정한 당정관계' 문제가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나타나며 우려를 사고 있다.

당 내부에선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분열을 계속하며 자중지란에 빠져 있고, 대통령과 면담에서도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박태홍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 열려

의원식 "국가 책임 부재... 대표 사과"

정기권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는 지난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추모제와 달리, 의원식 국회의원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기관 주도의 공적 추모제로 열렸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사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 159의 이름과 얼굴,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 오늘 우리는 각자가 존엄한 그 생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그 기막힌 슬픔과 공포를 온 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를 허리를 숙였다. /박태홍 기자